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6인 대책위원회

우100-806 서울 중구 남창동 205-146(2층)/전화 02-77-2792/휴대폰 010-3538-1069/전송 02-777-0211/대표 김지태/6인대책위' 소식지 2호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에 대한 항의

언론 탄압 중단하라

오늘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권리 중에서도 기본으로 여겨진다. 개인의 인격 형성과 민주주의의 전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5월 7일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우리 6인에게 집시법 위반죄를 들쭉거리 불법연행한 경찰, 우리 6인을 기소한 검찰, 우리 6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은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했다. 엄연한 사회 변혁 활동가들인 우리 6인을 "직업을 알 수 없는 자들"이라고 경멸조로 언급하며 시작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그런 점이 드러난다.

검찰은 우리가 "안보위기는 사기다. 이명박 정부는 준비중강이 아니라 복지를 늘려라", "IMF 긴축에 맞선 그리스 반란, 한국에서도 저항이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을 시민들에게 알리려 한 사실을 문제 삼는다.

이 같은 주장이 담긴 "몸피켓을 착용(하고) ... 피켓을 든 채 ... 구호를 수회 제창하고 ... '레프트21' 발행 명의의 신문 형식의 유인물들을 ... 사람들에게 건네 주었"으니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엄연한 등록 간행물인 〈레프트21〉을 유인물로 둔갑시켰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둘째,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무시했다.

검찰은 우리가 거리에서 〈레프트21〉에 담긴 주장을 외치고 몸 자보와 팻말에 정부 비판 문구를 담은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는 우리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지를 구하는 의견 형성과 전파의 자유도 포함한다.

신문 판매는 의견 교환 행위다. 기업주 언론들은 재력을 바탕으로 지국이나 가판대 등을 이용해 신문을 유통하는 반면, 〈레프트21〉은 독자 수 증대만이 아니라 독자와의 의사소통도 중시하기 때문에 거리나 집회장, 작업장과 대학 등에서 직접 판매를 한다.

기업주 언론들의 판매 방식은 독자와의 의사소통을 중시하지 않는 일방적 의견 전달 방식이라면 〈레프트21〉의 판매 방식은 독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상이한 목표에 따른 상이한 판매 방식 일지라도 언론의 자유가 기업주 언론에게만 보장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조차도 못 되는 것이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가 집회를 한 것인가? 일단인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는 것을 집회라고 규정하면, 집시법 위반으로 공격할 수 있는 표현 행위는 부지기수일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집회를 하지 않았다.

백 번 양보해 우리가 '집회'를 했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우리는 경찰의 계속되는 방해 때문에 더는 판매를 할 수 없어 스스로 '해산'했다. 경찰도 수사기록에서 시인했듯 경찰은 귀가하는 우리를 "추격"해 인적이 드문 골목에 1시간 반이나 구금한 후 강제연행했다. 해산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현행 집시법 조항으로도 우리를 처벌할 수 없다.

또, 현행 집시법으로는 '주장 내용'만으로 집회를 해산시킬 수 없다. 그래서인지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우리가 했던

주장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것 자체를 법리적으로 문제 삼지는 못했다.

따라서 〈레프트21〉 판매 행위 탄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다. 동시에 정치적 탄압이다.

우리가 연행당한 5월 초는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집시법과 선거법을 이용해 비판적 목소리를 공격하던 시기였다. 검찰은 정권의 필요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사회 정의를 위해 좌파적 주장을 거리에서 변함 없이 계속 할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우리를 계속 탄압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고정불변의 가치인 듯 보이는 민주적 권리가 사실은 사회 세력 관계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한다.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진짜 민주적 권리를 쟁취해왔다. 오늘날 방송 노동자들이 방송 장악에 맞서 투쟁하듯, 과거 수많은 언론 노동자들이 권력에 맞섰다. 조건 없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오늘날 헌법은 1987년 대항쟁의 성과다.

따라서 우리 6인의 투쟁은 진정한 민주적 권리를 위해 싸워 온 한국 노동자 운동의 전통 속에 있다.

다가올 9월 16일에는 벌금형 명령에 대해 우리가 제기한 정식재판이 처음 열린다. 우리는 법정에서 당당하게 우리 투쟁의 대의를 옹호하고 무죄를 주장할 것이다. 또 재판에 앞서 집회를 열어 결의를 모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민주적 시민들의 지지를 바란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 ·

언론 자유 수호 결의대회

일시 : 9월 16일(목) 오전 9시 40분

장소 : 서초동 법원 앞 삼거리 (2,3호선 교대역 10번 출구)

주최 : 6인 대책위, 〈레프트21〉, 민주노동당, 미디어 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구속노동자 후원회, 다함께, 보건의료단체연합 (9월 10일 현재)

〈레프트21〉 판매자 정식 재판

일시 : 9월 16일(목) 오전 10시 40분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판사 : 서울중앙법원 형사22 단독 소병진

6인의 투쟁에 보내는 지지와 연대가 확대되다

법원에 제출할 항의 서한에 각계 많은 인사들이 서명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권영길 의원, 강기갑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노회찬 대표, 민주당 정세균 전 대표, 천정배 의원 등 많은 정당 인사들이 서명했다.

또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문화방송노조 이근행 본부장, 한국방송 새노조 엄경철 본부장 등 노동과 언론 인사들이 서명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과 같은 진보 운동내 주요 인사들도 서명했다. 현재(9월 9일)까지 103명이 서명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법정 투쟁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에도 동참해 적지 않은 돈이 모였다.

오는 9월 16일 6인이 제기한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집회에 여러 단체들이 공동주최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공동주최하기로 했다. 그리고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주요 언론·시민 단체 49개가 포함된 미디어행동도 공동 주최를 하기로 했다.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자 법정 투쟁의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6인 대책위'는 사회적 지지를 더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일지

5월 7일 강남역에서 <레프트21> 판매하던 6인을 경찰이 불법 연행함

6월 26일 법원이 6인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8백만 원 벌금형을 선고함

7월 21일 검찰이 선고 한달만에 벌금지로 용지를 보냄.

7월 22일 '6인 대책위'를 구성함

7월 25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7개 진보 시민단체가 법원의 명령을 비난하는 연대 성명을 발표함

8월 5일 경찰의 위법 체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8월 6일 벌금형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함. 법원이 뒤늦게 보낸 약식명령문도 도착함

연행 사건 돌아 보기

5월 7일 저녁 7시부터 서울 강남역에서 김지태를 비롯한 6명이 <레프트21> 31호를 판매하고 있었다. 7시 40분 경 서초경찰서 경위 이종순과 정복 경찰 한 명이 다가왔다. 경찰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레프트21>을 보더니 "선거법 위반 아니냐", "국가보안법 위반일 수도 있다", "사상 검증을 해야 한다"는 등 위협적인 말을 했다.

이종순이 신문과 소책자를 압수하려 하자 판매자들은 이에 항의하며 판매용 간행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종순은 신문을 한 부 구입했다.

경찰의 계속된 방해로 더는 판매를 할 수 없어 판매자들은 자리를 정리했다. 지나가던 시민들까

지 모여들어 경찰에 항의하기 시작하자 경찰은 판매자들을 놓아주는 듯했다. 그러나 판매자들이 조용한 골목길에 들어서자 경찰은 뒤쫓아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잠시 기다려라" 하며 다시 판매자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할 것이 있다", "짜라시를 뿌리고 있었다"며 판매자들의 짐을 뒤지기 시작했다. 경찰은 1시간 30분가량 판매자들을 감금해 왔다.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경찰20여 명이 더 출동했고, "야간 집시법 위반"이라며 판매자들을 불법 연행했다. 경찰은 미란다 원칙 고지 같은 기본적인 임무 수행 규칙도 무시



했다.

강제 연행 과정에서 판매자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버티며 완강히 저항하자, 경찰은 폭력적으로 연행했고 판매자들은 다치고 안경도 깨졌다.

경찰은 유치장 안에서도 판매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5시간이나 캄코더로 감시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했다. 결국 판매자들은 47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렇게 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 트위터에서 6인 대책위 소식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트위터 <http://twitter.com/support6twit>

● 블로그와 이메일로 지지 메시지를 보내 주세요.

블로그 <http://support6.tistory.com>

이메일 support6@jinbo.net

● 소송비용과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변호사 선임비 등 법정투쟁에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은행 1002-337446-442(신명희)

후원 웹 페이지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웹 페이지 http://www.left21.com/B_support.php?from=support6

● 9월 16일 집회와 재판에 함께 해 주세요.